

화학사고 예방, 대기업들이 나선다!

LG 등 9개 대기업, 낡은 시설 개선 ... 2015년까지 2조8000억원 투자

국내 대기업 9사가 불산(불화수소산: Hydrogen Fluoride), 황산(Sulfuric Acid)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까지 2조8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7월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대기업은 하도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상 정밀 안전진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한화케미칼, S-Oil 등 9사가 낡은 시설 개선, 환경안전시설 강화, 유독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LG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적용해 온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된다.

누출탐지·보수시스템을 설치하면 화학물질 누출에 취약한 밸브, 펌프, 파이프 등의 연결부위에 센서를 뒀을 때 누출여부를 감지해 보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은 유해물질 누출에 따른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하도급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 계약 시 안전관리 역량과 사고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저입찰가 도급계약 방식이 하도급의 안전관리 역량 및 사고이력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산업계는 유해 위험정보를 하청기업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화학 설비의 정비·보수 등 위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방법과 내용을 확인해 허가하는 <작업허가서 발부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원청기업이 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도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2014년까지 소규모기업이 밀집한 시화, 반월단지 등에 무상으로 정밀 안전진단, 방문 기술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긴급정비가 필요한 시설에는 중소기업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각 기업이 제시한 안전·환경 투자 계획의 이행 과정도 정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2013년 5월부터 현장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과 3800여개 화학물질 취급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만든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05>